



광남일보



조간 제7987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음력 10월 28일)

“국립의대 없는 전남, 2027학년도 정원 배정돼야”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다음달 확정하는 가운데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의대 정원이 배정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과 정책적 판단을 종합해 내년 1~2월께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을 전제로 한 국립의대 설립을

정부,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 계획 내달 확정도 “통합의대 예비인증 절차 간소화시 개교 가능”

2027년 지역의사제·2029년 공공의대 순차 도입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와 두 대학은 통합 국립대 출범과 함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해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세워왔다.

정원 결정은 전남 국립의대 추진 일정과 직결된다. 2027학년도 정원 배정이 이뤄질 경우 국립의대 설립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지만, 정원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개교 시점이 상당 기간 늦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2027~2028년 지역의사제, 2029~2030년 공공의대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의대는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전남 국립의대는 공공의대와 달리 일반 국립의대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의대 도입을 전제로 한 정부 정책 기조 속에서 전남 국립의대가 2027학년도 일반 의대 정원 산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는 2027학년도 일반 의대 정원을 산출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의료 인력의 공급과 수요, 인구 대비 의사 수 등을 종합해 정원

산출 모형을 마련하고 있으며, 추계 결과는 보건복지부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정원 배정과 별도로 절차적 변수도 남아 있다. 현행 제도상 의대 개교를 위해서는 개교 시점 1년 3개월 전에 한국대학교육평가원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27년 개교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으며, 교육부 내부에서는 2030년 개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국립 전라남도연합형 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서미화 의원은 ‘국립 전남 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김문수 의원안에는 법 시행 이전에도 통합 의대 평가·인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국립의대는 정부의 의료 인력 수급 정책과 대학 통합, 입법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의대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를 설립한다는 국정과제 취지에 맞춰 정원 배정과 개교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신안 햇빛연금 모범적…전국 확산을”

이대통령, 기후부 업무보고

“담당 국장 데려다라도 싸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와 관련한 기후에너지환경정부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신안군 사례를 언급하며 “신안군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8면

이른바 ‘햇빛 연금·바람 연금’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역 주민이 태양광·풍력 발전에 투자하고 얻은 이익은 다시 주민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전국의 군은 전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데 신안군은 햇빛 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 속도를 빨리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신안군은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20억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나가다 우연히 (인터뷰를) 봤는데, 신안군의 담당 국장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남는 게 확실하지 않으나, 재생에너지는 부족하고 수입은 대체해야 하고, 공기와 햇빛은 무한하고, 동네에는 공용지부터 하다못해 도로, 공터, 하천, 논둑, 밭둑 등 노는 땅은 땅이 엄청 많지 않느냐. 에너지 부족 사태가 곧 벌어질 텐데,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을려 “다른 군 단위나 마을에도 확산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사업은 구매 보증을 해주니 남는 게 확실하다. 이걸 알아서 일종의 알박기처럼 선점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나주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16일 오후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환영 행사에서 윤병대 나주시장과 강위원 전남도경제부차장 등 내빈 및 참석자들이 비전선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핵융합 전용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는 한편, 300개 연관 기업 유치, 1만명의 고용창출, 약 10조 규모의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 군 공항 이전 협의체 본격 가동

오늘 광주서 첫 회의…재원·주체·용도비용 최대 쟁점

시 1조원 조달 방식·시행 주체·KTX 선이전 등 관건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태스크포스(TF)가 17일 첫 공식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가운데 군공항 무안 이전과 지원 방안을 둘러싼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17일 오전 광주

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군공항 이전 TF 첫 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TF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조정·중재하기 위한 협의체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과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강기정 시장, 김영록 지사, 김산 군수가 참석해 열린 사전협의의 후속 절차다. 당시 회의에서 정부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첫 공식 회동에서는 이와 같은 협의 결과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세부 합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용도 비용과 재원 조달, 시행 주체 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군공항 부지만 8.2㎢(248만평)로 상무지구 2.5배, 탄약고 부지까지 더하면 16.5㎢(500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5.7배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여서 상업·산업·주거 등 용도 비용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등 주거를 줄이고 숲이나 공원 등 공공성을 높이면 수익성이 떨어져 대기업도 나서기 힘든 구조여서 부족분은 정부가 재정적으로 메꿀 수 밖에 없다. ▶2면서 계속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컨설팅·설치·인허가·리파워링·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